

“반도체 시설투자 최대 30% 세액공제… 내일 법안 발의”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공개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단계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기간 30일→15일
인력양성 위해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과 기업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공개했다.

무소속인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도체특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4일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권한 부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

또,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

고, 학생 정원 확대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 및 겸임·겸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경쟁국들의 세

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아울러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당리당락을 초월해 헌정사 최초로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참석해준 특위 위원, 자문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며 “여야가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과 미래를 위한 협치의 새 지평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1면 ‘소비자 물가 6.3% ↑’서 계속

김밥 생산업체에 ‘갑질’…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공정위,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에
매입액·판촉행사비 등 총 195억 받아
불공정하도급 공정위 조사시작 후
정보제공료 명목 27억3800만원 수취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 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



편의점 GS25가 운영하는 무인매장. /GS리테일

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

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 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억 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점주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게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 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도시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15.7% 인상

기름값도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공업제품은 전년보다 8.9% 상승했다. 석유류 가격이 35.1% 올랐는데 경유(47.0%)와 휘발유(25.5%), 등유(80.0%), 자동차용 LPG(21.4%) 등이 모두 상승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책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 소폭(0.1%) 하락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료(18.2%), 도시가스(18.3%), 지역난방비(12.5%) 등도 모두 올랐다. 지난 달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대비 15.7% 상승했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 달 채소류, 육류 중심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있다”며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7월 들어 외식과 같은 야외활동도 늘면서 숙박,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이 회복세를 보였고, 개인 서비스 물가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생활물가지수가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아 체감 물가와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체감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실제 국민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데, 1년 전보다 7.9% 오르며 8%대에 육박했다. 이는 1998년 11월(10.4%)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생선, 해산물, 채소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한 신선식품지수도 전년 대비 13.0% 상승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적 영향으로 다음 달부터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추석 명절이 물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다음 달 민생안정 대책 등 물가 잡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대기업과 동반수출 등 중소기업 위한 정책 절실”

>> 1면 ‘중소 수출액 느는데’서 계속

지난해 국내 총 수출 5대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이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5대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용 장비로 전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컸던 화장품의 경우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자국 소비자에 특화된 제품을 자체 제조하거나, 아예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의 화장품 OEM 회사인 콜마, 코스맥스 등에

위탁 생산하고 있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화장품의 중국 수출길은 앞으로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수출 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기업수가 증가하는 등 외연이 넓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수출 중소기업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면서 “중국과 관련한 경제·정치적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것도 우려의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수출, 시장 조사·마케팅 등 중소기업간 공동수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활성화,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물류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연구원은 올 한해 중소기업 수출액을 지난해의 1171억 달러보다 4.3% 늘어난 12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큰 폭으로 성장한 기저효과로 올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수출 증가폭은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이날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주현 차관 주재로 중소기업 수출과 관련한 ‘기업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중기연구원 등 연구기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앞서 무역협회가 내놓은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SBI)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115.70이던 ESBI는 2분기 96.1, 3분기 94.4 등으로 점점 침체될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